



조선대 장미의 유혹

22일 '백만송이' 장미가 앞다퉈 피기 시작한 조선대 장미원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제9회 장미축제'에는 많은 시민들이 물려 형형색색 장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김진수기자 jeans@

■ '예속 자치' 언제까지

① 중요사무는 모두 중앙부

귀찮은 업무만 떠넘긴 '2할 자치'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중앙정부로의 재정 및 권한 집중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정부가 취약한 재정, 권한의 예속, 자치역량 미흡 속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정부가 정략적으로 내건 수 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LH 분사 이전 부지 결정 등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진 국론 분열과 공정성 시비 등의 근본원인은 중앙정부 및 수도권 집중 심化와 허약한 지방자치에 있다고 진단한다. 광주일보는 5차례에 걸쳐 현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물을 실는다.

7년간 고작 1% 이양... 대부분 복지분야

지난 2008년 말 지방분권추진 위원회가 출범한 뒤 2009년 697건, 2010년 427건의 사무가 중앙정부부처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그러나 이양된 사무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사소한 업무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항만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일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무들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양된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 불필요하거나 사소한 업무들이 대부분"이라며 "핵심적인 사무는 아예 없다"고 못박았다.

지역민의 대표자인 단체장과 의원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거기에 단체장과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8.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7년 전인 지난 2002년 국가사업 4만1603건, 지방사무 1만1363건으로 72.7% 대27.3%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7년 동안 비율로는 고작 1%, 겨우 628건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양된 사무의 대부분이 복지 관련 업무로, 이 업무는 재정 대책 없이 광역·기초자치단체로 넘겨지면서 이를 자체의 재정이 크게 악화하는 원인이 됐다.

▶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

하위 50%까지 지원 확대... 선심성 정책 지적도

여권이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추진한다.

소득구간 하위 50% 가정의 자녀에게 소득구간별 등록금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 계층에게는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학부모·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및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당의 목소리를 받아야 한다고 견의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등록금도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1인당 연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또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별 투명한 재정 공시 ▲학생 1인당 직접 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 공시 ▲장

학금 내역 및 확충 계획 공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당장 재원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대선공약이던 반값 등록금 추진을 보류해왔다.

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격렬하게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무상 등록금 등의 학무를 꺼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27 재보선 참패 이후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일 訪中

김정은 동행 확인안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새벽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00년과 2001년, 2004년, 2006년, 2010년 5월과 8월에 이어 일곱 번째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이번 방중에 북한의 2인자 격인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

며 보수우익세력의 등재 반대 시도가 민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진위는 애초 5·18 기록물에 신문자료, 병원자료, 연구물 등까지 포함시켰으나 순수자료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기관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시민 성명서, 사진·필름, 피해자 병원 치료기록, 국회 자료, 미국 비밀해제문서 등 9개 주제로 줄여 기록문서철 4271권(85만8900여 페이지), 필름 2017개 등을 제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연합뉴스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이번주 결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이하 5·18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는 "22일 개막한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사하는 국제자문위원회(IAC)가 오는 26일까지 유네스코 총회 기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국에서 제출한 5·18 기록물, 일성록(조선 영조의 일기) 등 2건을 포함한 59건을 다루게 되며 이 중 4건은 예비추천으로 등재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진위 관계자는 "55건은 이미 등재가 확정됐다고 봐도 무관하지만 4건은 심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5·18 기록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보수우익세력의 등재 반대 시도가 민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진위는 애초 5·18 기록물에 신문자료, 병원자료, 연구물 등까지 포함시켰으나 순수자료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기관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시민 성명서, 사진·필름, 피해자 병원 치료기록, 국회 자료, 미국 비밀해제문서 등 9개 주제로 줄여 기록문서철 4271권(85만8900여 페이지), 필름 2017개 등을 제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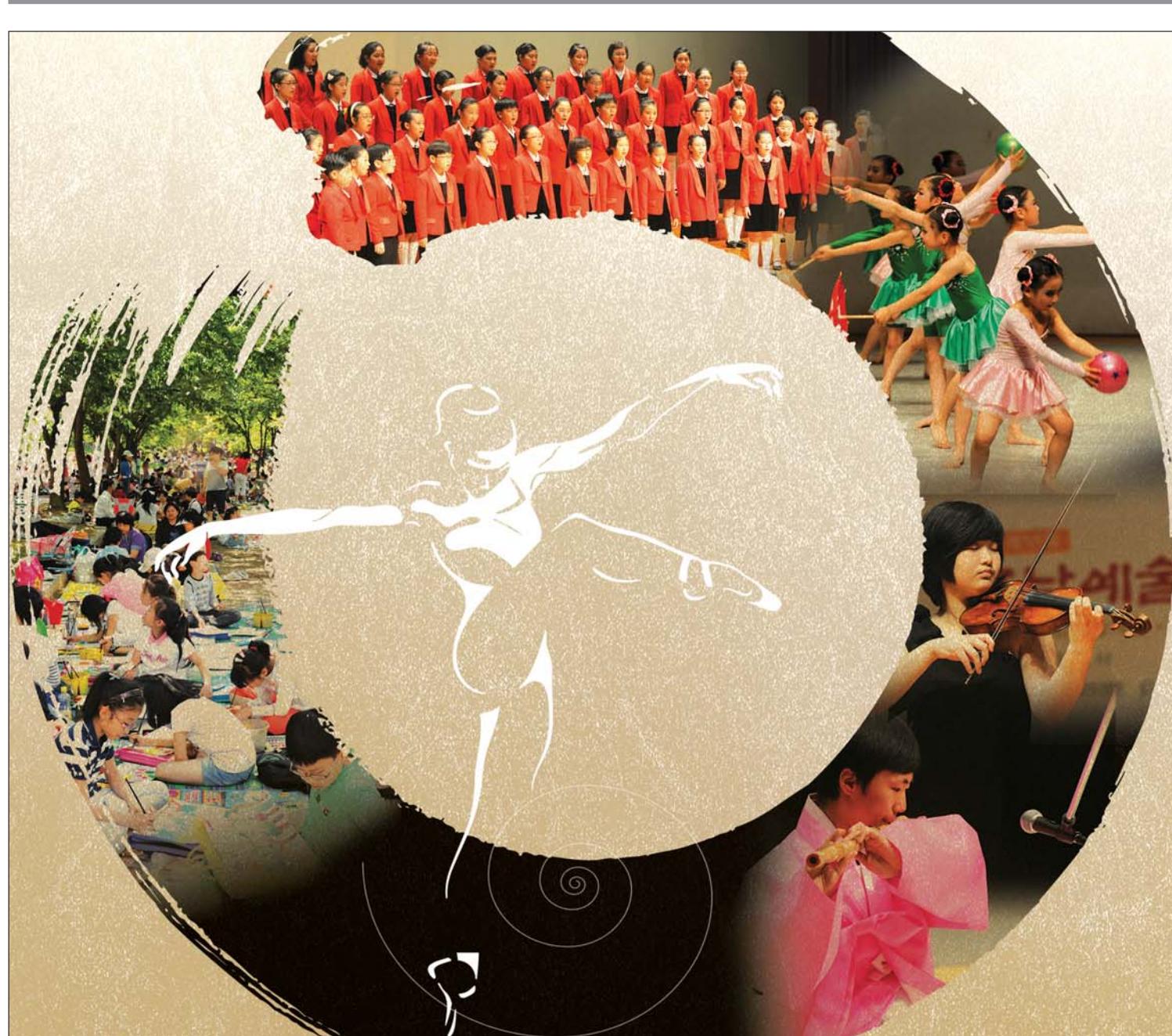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5탄 '현대시와 예술적 상상력'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시를 읽어 보라"

한편의 시가 때론 운명을 바꿀지 모른다"

- 나희덕 조선대 문예창작학 교수
- 26일(목요일) 오후 4시 빛고을문화관 4층 다목적홀
- 문의 : 062-670-7423, 062-220-0651

光州日報 社 · 광주문화재단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 전국대회

2011. 4. 28(목) ~ 6. 1(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금호파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주최 | 광주일보사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 062. 220. 0541